

부실법제(法制)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으려면 정부정책 변해야 한다

“Change we can believe in”은

미국 대선후보 버락 오바마의 슬로건입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미국시민을 향한 구호입니다.

우리도 변화를 갈망합니다. 정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구조기술사에게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구조기술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구조기술사가 감리업무도 할 수 있도록 건설용역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간단하게 만드는 것은 복잡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몰락위기의 건축구조 분야

건축구조기술사는 국가와 건설산업에서 귀중한 자원입니다.

설계단계든, 시공단계든, 대학에서든 없어서는 안 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인정한 최고의 엔지니어가 될 마당이 너무 좁습니다.

너무 좁아 골병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활용해야하는 책임은 감독(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기술사는 건설용역체계의 2군(보조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구조계산만 하는 단순기능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건축구조분야는 몰락합니다.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구조분야를 떠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정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의 건설산업 용역체계는 우리의 머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경섭
부회장



김승철
총무단장



김치윤
정책위원장



강창선
법제개선특별위원장

단기하중도 아닌 장기반복하중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음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십년된 관행과 설계용역시스템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중국처럼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 뒤에야
 법과 제도를 바꾼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건설관련 법과 사업을 운용하는 정부와 공무원들은 먼 산만 바라봅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막중한 역할을 인정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열심히 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합니다.
 미국처럼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도록 말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구조가 위태롭습니다. 百尺竿頭(백척간두)입니다.

존폐기로의 설계전문회사

2007년도 건축구조기술사대회에서 한국설비기술협회 임형택 사무국장이
 설계전문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처럼 제시했습니다.

- 1) 건축, 구조, 설비, 전기 등 8개 분야의 설계전문용역 관련단체가 가칭 건축물설계단체협의회를 구성한다.
- 2) 전문분야 간의 대립과 무관심에서 벗어나 상호이해와 화합을 통해 국민의 안전, 건설산업발전과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공동선을 모색한다.
- 3) 공공과 민간부문 공히 적정 설계비가 지급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서 8개 분야는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조정, 토목입니다.

건설사업이 성공하려면 8개 분야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중앙이나 지방건설심의에서도 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그런 전문가 집단이 만든 협의회가 지적인 설계관행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의 용역은 분리 또는 공동계약하나 설비, 구조, 토목, 조경분야는 건축설계사로부터 하도급 받고 있다.
- 2) 설계 하도급자인 전문분야는 최저 비용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한다.
- 3) 설계비 미수 내지 지연으로 인해 전문업체의 경영악화 및 부실한 설계환경이 조성된다.

위와 같은 요인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설계전문회사의

설계완성도가 미흡한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공단계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수반하여 공사비가 증가되고 건물기능 저하는 물론 전문분야의 기술력이 저하되거나 퇴보하는 실정입니다.

겉만 반질하고 속은 썩어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관행으로 공학 분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설계전문업체의 경영환경은 1997년 IMF 이후 해마다 악화하고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에 따라 힘 없는 엔지니어와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건축을 포함한 8개 분야는 대학 내 공과대학의 중요한 학과입니다.

건축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그리고 정보통신학과입니다.

솔한 학부모들이 자식의 내일을 기약하며 보내는 학과입니다.

이런 산업현장의 현실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안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법인세를 인화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말이 기대됩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산업현장의 외침에 귀 기울이면 풀릴 수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정부가 건설용역 시스템을 바꿀 때까지

각 전문분야 엔지니어들이 서로 아껴주고 배려해야 합니다.

정글에서는 살아남는 자가 강자라 하였습니다.

一心同體(일심동체)입니다.

건축행정공무원의 책무

조달청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을 위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건축공사 설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시설공사 설계검토업무 시행 안내〉

■ 목 적

- 건축공사 설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공사품질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지원
- 설계변경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예방

■ 설계관리 서비스 내용

- 설계도서 검토 서비스
 - 1) 설계과업내용 반영여부, 구조설계의 적정성, 설계도서 간 일치성, 설계도서의 완성도·시공성, 예산과의 합치성 검토
 - 2) 검토결과에 대하여 수요기관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의견제시
- 설계변경 검토 서비스
 - 1) 설계도서 검토를 대행한 공사로서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설계변경 조건의 타당성 및 설계변경 내용(변경수량, 변경단가 등)의 적정성 검토

조달청이 발표한 내용은 공공사업에서 설계결함이 많음을 암시합니다.

시스템상으로 국내의 공공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계약의 주체입니다.

조달청이 시행하는 서비스는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근원적 해결은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조달청이 밝힌 부실설계의 원인에 대하여

건축물설계단체협의회가 제시한 해결방안은 설계용역 발주시 각 해당 전문설계업체와 공동계약을 하도록 기존의 관행과 방침을 바꾸는 겁니다.

설계자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 근본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전문가 책임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힘센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영 방침을 바꿔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나 조달청에서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먼 데가 아닌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務遠忽近(무원홀근)입니다.

실용정부에 대한 기대

건설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은 공학능력을 갖춘 엔지니어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회는 국토해양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전문가집단입니다.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집단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건축구조기술사는 설계자가 아닙니다.
구조계산서만 작성했을 뿐입니다. 구조도면에 서명조차 건축설계사가 합니다.
그리고도 공사현장에서 구조문제가 발생하면 뛰어가기야 합니다.
권한은 없고 책임은 무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를 구조설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건축구조설계기준은 구조계산서가 아니고 구조설계서라고 바꿨습니다.
건축구조분야를 살리고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려면 정부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도급자에 머물면 조만간 건축공학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미 건축구조분야를 지원하는 학생은 보물찾기 보다 힘듭니다.
더 무너지지 않도록 기를 쓰고 막아야 합니다.
정부나 공무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존재만 인정합니다.
선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감독(정부)이 배려해 주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때까지 우리는 맨유의 박지성처럼 죽어라고 뛰어야 합니다.
좋은 제도란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뛰도록 하는 겁니다.
FTA 상대자인 미국에서도 다음처럼 씁니다.

“Responsibility of the architect / Structural engineer”

설계책임은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대등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모든 건설단계에서 건축구조기술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구조기술사에게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야 합니다.
구조기술사가 감리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합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간단하게 만드는 것은 복잡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 흐르듯 해야 합니다. 실용정부가 할 일입니다.
上善若水(상선약수)입니다.

국내외 건축구조분야 관련제도의 현황

구 분	설계 도서	설계 감리	구조 감리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사가 구조도면을 작성(극히 일부 규모 이상의 건축구조에 대하여 구조기술사가 검토 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의 오류를 판단할 수 있는 설계감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없음 - 극히 일부 관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감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감리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및 계획 - 건축사 • 구조, 시공, 설비등 - 전문분야 기술사 수행 - 책임보증보험가입의 의무화로 인하여 업역구분이 확실하게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시공, 설비등 엔지니어링 관련 분야의 기술사가 설계 수행 - 각 분야별로 책임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시공, 설비등 엔지니어링 관련 분야의 기술사가 감리 수행 - 각 분야별로 책임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 수행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설계자가 구조도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감리제도 확립 - 모든 건물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감리하는 제도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감리제도 확립 - 중요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 관청에서 추가로 감리 실시.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는 구조전문가의 고유 권한으로 독립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는 구조전문가의 고유 권한으로 독립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는 구조전문가의 고유 권한으로 독립되어 있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인 장치는 없으나 구조기술자가 구조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보편화됨. • 최근 구조전문가협회의 발족으로 구조 분야에 대한 독립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인 장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인 장치 없음 - 다만, 종합감리제도안에 구조상담 분야가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

■ 각국의 특색

- 미국 : 책임있는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벌칙도 강화.
- 독일 : 설계 및 공사에 대한 감리제도가 가장 발달.
- 싱가포르 : 특히 구조전문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일을 일임함.
- 일본 : 최근 구조 전문가의 발족으로 구조분야에 대한 독립성 확보.